권두언

문화융성의 시대, 시민들의 문화행복은?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문화융성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청와대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실 문화융성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고 용어로만 보면 자율과 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이 시대의 문화관에 비해 지나치게 계몽주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취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은 국가번영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번영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번영으로서 문화융성은 "문화가 국력",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트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취임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문화융성은 국가번영, 창조경제의 동력으로만 이해되지는 않는다. 문화융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다.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언급은 통상 번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화융성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주의적인 문화모델이라기보다는 일상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어울리는 말이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경제, 혹은 국력의 "수직적 상승하기"의 의미와 다르게 "수평적 스며들기"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융성은 경제적 번영으로서 의미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문화이다. 문화융성의 의미는 창작자들의

예술 창조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강조하고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융성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만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문화융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정책은 중앙과 지방을 이분화시키고 지방의 지역 문화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문화를 이식하려는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의 문화가 중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예산과 문화행정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와 문화적 접근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남 도민들은 문화융성의 시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충남도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인프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화적 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충남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행복할까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충남지역의 문화향수 지표들은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썩 좋지 않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역의 시민들이 실제 몸으로 문화적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가에 있다. 충남 도민들이 많은 문화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문화향수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의 시작이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창작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여가 시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 문화융성 정책이 실현해야 할 것들이다. 결국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야 말로 문화융성의 궁극인 목표가 아닐까?